「점자법」의 제정과 시행

김호식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장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간다. 컴퓨터를 켜거나 스마트폰을 손에 쥐면 거의 무한대의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다. 인기 신간 도서가 나오거나 보고 싶은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가 있으면, 전자책 단말기를 통해 주문하고 책값만 치르면 그 순간부터 바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서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다. 만약에 돈이 없거나 돈을 쓰고 싶지 않으면, 도서관에 가서 빌려 보거나 대형 서점에 갖추어진 편안한 임시 독서 공간에서 책을 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정보와 독서의 세계에서 소외된 채 살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시각 장애인이다. 이들은 접근성 지침을 따르지 않고 개발한 전자책 단말기 때문에 전자책을 활용할 수 없고,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책을 구하더라도 맛있는 종이 면만 만질 수 있을 뿐 그 책을 읽을 수가 없다.

시각 장애인이 정보와 독서의 권리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웹 접근성 지침이나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지키면서 누리집을 개발해야

한다. 시각 장애인이 누리집을 돌아다니며 검색하고, 그 결과를 읽으며, 구매를 위해 결제하는 과정까지 모두 혼자서 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한 단계에서 먹통이 되면 내가 원하는 때에 정보를 구할 수 없다. 다음으로 책을 읽기 위해서는 묵자 도서[먹 묵(墨) 자를 써서 점자 도서와 상대되는 일반 도서를 가리키는 말]를 점자나 음성으로 바꿔 주어야 한다. 점자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점역사와 점자 교정사가 필요하고, 음성 도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 성우나 낭독 봉사자, 음향 편집사 등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도 점자 단말기(braille display)를 연결하여 중요하고 복잡한 부분은 글로 읽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들어 중도 실명자가 증가하면서(선천성 시각 장애인이 10%, 후천성 시각 장애인이 90%) 점자를 사용하는 시각 장애인의 수가 줄고 점자의 중요성이 간과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시각 장애 학생이 공부하는 학습서나 전문 서적, 특히 전문직에 종사하는 시각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자료나 도서는 정확성을 위해 점자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또 필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원할 때 다시 읽기 위해서도 점자의 사용은 매우 중요하다.

한편, 세종 대왕께서 만들어 주신 한글을 읽고 쓰며 잘 다듬어 가야 하듯, 송암 박두성 선생이 1926년에 만들어 주신 한글 점자(맹인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에서 ‘훈맹정음’이라 함.)도 요긴하게 읽고 쓰며 잘 다듬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자 의무라 하겠다.

이러한 시기에 「점자법」이 제정되고 지난 5월 30일 시행에 들어간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점자법」 제정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점자법 시행령」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점자법」과 「점자법 시행령」의 제정 경과와 내용, 그리고 향후 발전 과제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점자법」의 제정 경위와 배경

2.1. 「점자법」의 제정 경위와 배경

필자에게 최동익 의원실로부터 점자기본법안의 초안이 처음으로 전달된 날은 2013년 2월 26일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수화기 본법 제정이 19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채택되고 정부의 국정 과제에 포함되어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그 후, 이메리사 의원을 비롯하여 4명의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였고, 그 결과 「한국수화언어법」은 「점자법」보다 1년 먼저 제정되고 시행되었다.

한글 점자는 제생원(지금의 국립서울맹학교) 교사였던 송암 박두성 선생이 7명의 시각 장애인 제자들과 일제 치하에서 비밀리에 연구·개발하여 1926년 11월 4일에 반포하였다. 일제 강점기 때에 제생원의 시각 장애 학생들에게 점자를 가르쳤고, 지방에 있는 시각 장애인에게는 통신 교육을 통하여 한글 점자를 가르쳤다. 광복 후에는 국립서울맹학교의 시각 장애인 교사들을 중심으로 점자 규정이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정비되었고, 음악 점자와 수학 및 과학 점자 등 부족한 규정들이 보완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임의 단체인 ‘한국점자연구위원회’가 결성되어 한국점자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하여금 정부 고시로 공포하게 함으로써 점자를 공식적인 문자로 승인받게 하였다.

현재 법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우편법」, 「공직선거법」, 「주민등록법」, 「화장품법」 등 여러 곳에 점자에 관한 규정들이 단편적이고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시각 장애 아동들은 장애가 중복·중증화되고 후천적 중도 시각 장애인들은 점자를 제대로 배우지 않아 점자 사용 인구가 줄어드는 등 점자의 위기 현실이 도래한 상황이다.

2013년 6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장애인복지포럼과 최동익 의원의 주최·주관으로 ‘점자의 발전,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문에서는 점자를 읽고 쓰는 시각 장애인은 점자를 모르는 시각 장애인보다 자아 존중감이 높고 취업도 더 잘된다고 하면서, 맹학교 저학년엔 점자를 모르는 담임 교사가 배정되거나 중도 실명자의 점자 교육이 부족한 면들을 개선하기 위해 「점자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점자기본법」 제정의 근거와 타당성으로는 먼저 「수화기본법」 제정에 따른 장애 유형 간의 형평성을 언급하였고, 둘째로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외국의 입법 사례를 들었으며, 마지막으로 점자 교육, 점자 자료의 보급, 점자 관련 전문가 양성, 점자 표기 규정 정비 등을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점자 육성 및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의 실천에 필요한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위 토론회에서 공개된 「점자기본법안」 초안은 4명의 토론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고치고 다듬어서 2013년 12월 12일 최동익 의원 등 26인이 발의하였다.

「점자기본법안」에서 밝히고 있는 제안 이유는 ① 점자에 대한 법령 조항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점자 사용 환경이 미비하고, 이로 인하여 시각 장애인이 입법·사법·행정적 차별뿐만 아니라 교육·취업 및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차별을 겪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② 시각 장애인의 문자 향유권 확보를 위해서는 이들이 문자로 사용하고 있는 점자를 공식 문자로 인정함과 아울러 점자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고 정보를 활용할 권리를 인정하여야 함 ③ 점자가 어문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 공식적 문자임을 밝히고, 점자의 발전·보존·교육·보급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시각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활동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을 들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점자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점자위원회를 두고 점자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10조) ③ 정부는 매년 11월 4일을 점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하도록 함(안 제16조) ④ 점자의 발전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20조)을 담고 있다.

법안이 발의된 후 제정되기까지의 경과는 2015년 2월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라 한다.)에 법안이 상정되었고, 2015년 5월 4일 교문위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19대 국회 종료를 앞둔 2016년 5월 10일 교문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되었고, 2016년 5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결국 19대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2016년 5월 29일 드디어 「점자법」이 제정 및 공포되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7년 5월 30일로 정해졌다.

「점자법」의 주요 내용은 ① 점자의 발전과 보전을 위해 점자발전기본계획 수립(제7조) ②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제8조) ③ 점자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 조사 실시(제9조) ④ 시각장애인 학생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점자로 제작·보급(제12조) ⑤ 점자 출판물을 제작·보급하는 시설에 비용 지원(제12조) ⑥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게 자격 부여(제18조) 등이며, 총 4장 20조로 구성되어 있다.

「점자법」이 통과되면서 가장 주목할 내용은 “제4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 금지) ①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② 공공기관등은 입법·사법·행정·교육·사회문화적으로 점자의 사용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생각한다. 점자가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고 함으로써 점자가 공식적인 문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시각 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점자를 문자로 차별 없이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 조항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

어 모든 시각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어문 자료를 점자나 전자 파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한편, 19대 국회 회기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부와 이견을 보이는 조항 및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들이 모두 삭제되어, 법안이 기본 골격과 허울만 남은 채 통과되었다는 비판도 있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법의 명칭이 「점자기본법」에서 「점자법」으로 수정되었고, 점자에 관한 정책 수립과 규정 관리를 할 상설 기구로 제안한 점자위원회 신설은 삭제되었다. 11월 4일을 「점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하도록 한 조항은 날짜를 정하지 않고 임의 조항으로 변경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치하는 조항도 삭제되었다. 이는 앞으로 보완하거나 재추진해야 할 과제들이다.

2.2. 「점자법 시행령」의 제정 경위와 배경

「점자법」의 시행일은 「점자법」을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17년 5월 30일이었다.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만들어야 했는데, 먼저 시각 장애인의 대표 단체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이라 한다.)가 「점자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특별팀(TFT)을 꾸리고 활동에 들어갔다. 특별팀은 외부 전문가 4명과 한시련 정책실 담당자 등 10명으로 꾸려졌으며, 2016년 8월 30일에서 2016년 10월 21일까지 세 차례의 회의를 거쳐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점자법」에 실질적인 내용이 거의 빠져 있어 시행령을 통해 보완 입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래서 시행령에 담을 내용으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뿐만 아니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까지 가능한 한 많은 내용을 담아 문화체육관광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한시련이 마련한 「점자법 시행령(안)」은 2016년 11월 9일 한시련 주관의 토론회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되었다.

한시련의 「점자법 시행령(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점자 발전 기본계

획의 수립과 점자 규정의 제·개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점자심의위원회’를 설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추진 실적을 관보에 게재 ③ 매 3년마다 별도의 점자 관련 실태 조사 ④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제작하기 위한 디지털 파일 납본의 의무화 ⑤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점자출판시설의 기준 ⑥ 매년 11월 4일을 ‘점자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실시 ⑦ 점자 정보화의 추진 ⑧ 점역사, 점자교정사, 점자지도사 등 점자 관련 전문인력 자격의 종류와 요건 ⑨ 점역사와 점자교정사의 자격 부여를 위한 점자검정시험의 실시 ⑩ 점자지도사 양성을 위한 점자지도사연수원의 지정 등이다.

한시련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도 시행령 마련에 들어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적 근거가 약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추가로 제정하려 하기보다는, 향후 「점자법」 개정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입장을 취했다. 결국 시행령(안)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최소한으로 담게 되었고, 그 내용은 실태 조사, 교과용 도서의 범위, 점자 출판 시설의 기준, 점자 관련 전문 인력 등이었다. 점자 출판 시설의 실태 조사와 지원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한시련과 점자 도서관 관계자 및 점자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2회의 자문 회의를 진행하였다. 2017년 2월 15일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확정된 시행령(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2017년 5월 30일 드디어 시행에 들어갔다.

3. 외국의 점자 관련 법률

미국은 「특수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 「재활법(Rehabilitation Act)」,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등 연방법에서 점자 교육, 대체 자료의 제작 및 보급, 점자에

관한 편의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1987년 미네소타주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점자 관련 법에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32개 주에서 점자 관련 주법을 채택하고 있다. 법률 및 시행 규칙의 제·개정은 모법인 연방법의 제·개정 시기와 연동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2000년대 이후 지속적인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점자 관련 법의 목적은 ① 전맹 또는 저시력 학생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에 적절한 점자 습득 및 활용 교육 시행을 보장 ② 점자 읽기 및 쓰기 능력 표준 확립 ③ 점역 가능한 형태의 전자 파일로 학습 자료 제공 ④ 점자 지도 교사에 대한 점자 능력 검정 자격증 취득 의무화 등이다.

일본은 점자를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문자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 문자로 인정하여 점자 시민권 확립이라는 방향으로 법률과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1925년 지방 의회 선거에서 시각 장애인이 점자로 투표한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후 「공직선거법」에서 점자 투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우편사업주식회사 국내 우편 약관에 점자 내용 증명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점자로 작성된 내용 증명 우편도 문자로 작성된 내용 증명 우편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는 문서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2010년 나고야 지방 법원에서 전맹 변호사가 점자로 작성한 소송장을 수령하여 그 효력을 인정한 후부터는 점자로 작성한 소송장도 그 효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유럽 국가들은 유럽 연합이 제시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의약품의 명칭과 복용 방법 및 주의 사항 등을 점자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직 선거에서 선거 정보를 점자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4. 「점자법」의 내용과 의미

여기서는 「점자법」의 원문을 살펴볼 기회를 가지면서 각 조항별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하려고 한다. 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점자법

[시행 2017. 5. 30.] [법률 제14205호, 2016. 5. 29., 제정]

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 044-203-253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 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시각장애인은 문자 수단으로서 점자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국민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계승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1조(목적)와 제2조(기본 이념)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시각 장애인의 점자 사용을 시혜에서 권리로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시각 장애 학생이 공부하는 데 필요한 학습 자료, 시각 장애 유권자가 공직 선거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선거 공보물 등 관련 자료, 모든 시각 장애인이 독서를 즐기기 위해 필요한 도서 등을 점자 자료로 볼 수 있도록 정당한 권리로써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권리 주장에 대해 국가와 국민이 책임을 갖게 함으로써 점자 사용권에 대해 이념적으로 확립을 하였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점자**란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하여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도록 튀어나온 점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합한 표기문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도형·그림 등을 촉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된 **촉각자료를 포함한다.**
2. 전자점자란 점자정보단말기 등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전자적으로 생성된 점자를 말한다.

3.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4. 점역이란 일반활자, 표, 그림, 기호 등을 점자로 변환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5. 교정이란 점역본과 원본을 대조하여 오기·왜곡·첨가·누락된 내용 또는 점자 규정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행위 등을 말한다.
6. 점자규정이란 한글 자모, 약자, 약어, 수학·과학·컴퓨터, 음악 등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호, 외국어, 문장부호 표기 등 점자의 사용에 있어서 필요한 규정을 말한다.
7. 공공기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점자의 정의에 어문 자료뿐만 아니라 그림이나 도형, 도표 등 촉각 자료도 포함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현재 시각 장애 학생이 사용하는 점자 교과서는 대부분 그림이 생략되어 있어 해당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앞으로는 이러한 촉각 자료를 점역하는 규정도 만들어지고 그 내용도 점자 교과서에 삽입되어 온전한 점자 교과서가 제공되길 희망한다. 이제는 시각 장애인이 종이에 찍힌 점자만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작은 핀을 이용하여 점자를 구현하고 내용에 따라 계속 변환 가능하도록 하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사용하여 점자 자료를 읽는다. 전자 파일을 제작하면 점자와 음성의 접근이 모두 가능하다. 이러한 면에서 점자 정보화는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제4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①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② 공공기관등은 **입법·사법·행정·교육·사회문화적으로 점자의 사용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필자는 이 조항이 「점자법」의 내용을 가장 핵심적으로 선언하고 있다고 본다. 여기서는 점자의 국내 지위를 한글과 동일한 수준으로 명기한 점에 그 의미가 있다. 우리 점자에 대한 지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보다는 한글과 같은 지위로 하여 모든 법적 권리를 인정받게 하고, 공공 기관에서 점자 사용을 차별할 수 없게 함으로써 각종 행정 서류들을 점자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 시각 장애인이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시각 장애인이 요구하는 일반 문서를 점자 문서로 제공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 등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시행되느냐가 이 법의 성취 수준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1년에 간행되는 5만여 종의 출판물 중에서 약 5% 정도만이 대체 자료로 제작되고 있으며, 선거 공보물은 면수 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일반 문서의 3분의 1 정도만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2장 점자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점자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점자 관련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점자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자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점자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증진과 점자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점자정책과 점자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점자의 가치 홍보 및 점자문화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6. 점자의 보급 및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7. **점자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점자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
9. **점자 관련 전문 인력의 자격 부여 및 양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점자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등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5년마다 점자 발전 기본 계획과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점자법」이 제정된 가장 크고 기본적인 성과라고 생각한다. 정부 주무 부처(문화체육관광부의 국어정책과와 국립국어원의 특수언어진흥과)는 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의견도 수렴할 것이고, 집행한 사업 실적도 평가하면서 발전해 갈 것이다.

제7조의 내용 중에는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한 점자를 비교하고 연구하는 것이 눈에 띄며, ‘점역사, 교정사, 점자 지도사 등의 국가 자격화’를 통해 시각 장애인의 직업 창출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제9조(실태 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실태 조사는 정확한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각 장애 관련 전문가들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대로 된 실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실태 조사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다.

제10조(점자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 관련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점자규정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점자 사용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 2017년 3월 28일에 고시된 점자 규정에는 한글 점자, 수학·과학·컴퓨터 점자, 한국 음악 점자, 서양 음악 점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제3장 점자사용의 촉진 및 보급

제11조(점자교육의 기반조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12조(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디지털교과서 등 전자저작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점자로 제작·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과용 도서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점역·교정사
2. 점자제판기 또는 점자인쇄기
3. 점자물제본기
4. 그 밖에 점자출판에 필요한 설비 및 소프트웨어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구체적인 기준, 지원규모,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에서는 선천성 시각 장애 아동을 위해서는 맹학교에서, 후천성 중도 실명자를 위해서는 점자 도서관이나 복지관, 안마 수련원 등에서 점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12조에서는 시각 장애 학생들을 위한 점자 도서 제작을 의무화하였고, 점자 출판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기준을 수립하였다. 교과용 도서의 범위와 점자 출판 시설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다.

제13조(교과용 도서 및 공문서 등의 점자규정 준수) 교과용 도서와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 기타 출판물을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점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점자문화의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들의 점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기념행사의 추진) 국가는 점자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점자 규정의 준수와 점자에 대한 홍보 및 인식 개선도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11월 4일을 점자 기념일로 제정하지 못하여 기념행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는 향후 추가 입법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제16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이 부분은 민간단체들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에 대한 조항으로, 운영비와 사업비 및 대체 자료 제작비 등에 대한 지원을 점자 도서관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17조(점자정보화의 촉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의 사용·점역·교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기, 서비스 등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여야 한다.**

→ 이 조항은 정보화 시대에서 점자 또한 정보 기기를 활용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독려하는 조항으로 만들어졌다.

제18조(점자관련 전문 인력의 자격 부여 등) ① 공공기관 등은 **점자 관련 전문 인력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재 점역·교정사 자격 제도는 국가 공인 민간 자격으로 한시권이 자격 검정 시험과 자격증 교부 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국가 자격으로 승격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점자지도사 자격 제도는 신설되어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9조(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점자의 사용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4205호, 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점자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6-39호)은 제10조에 따른 점자규정으로 본다.

5. 「점자법 시행령」의 내용과 의미

여기서는 「점자법 시행령」의 원문을 살펴볼 기회를 가지면서 각 조항별 구체적 의미를 설명하려고 한다. 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점자법 시행령

[시행 2017. 5. 30.] [대통령령 제28056호, 2017. 5. 29., 제정]

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 044-203-2538

제1조(목적) 이 영은 「점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 조사)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실태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 관련 인력의 점자사용능력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점자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항
3. 점자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4. **점자교육**에 관한 사항
5.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점자의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점자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제3조(교과용 도서의 범위) 교육부장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점자로 제작·보급하여야 하는 교과용 도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과서로 한다.

→ 이 조항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교과서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각 장애 학생이 공부를 하는 데에는 참고서와 문제집,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유인물, 시험지, 가정 통신문 등 다양하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시각 장애인 교사에게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지도서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제4조(점자출판 시설 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점역·교정사로서 상근하는 사람 1명 이상**
2. 점역 편집과 점자 인쇄에 사용할 **컴퓨터 2대 이상**
3. 점자제판기 또는 **점자인쇄기 1대 이상**
4. **점자물제본기 1대 이상**
5. 점역 편집이 가능한 **점역 소프트웨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점자 출판 시설의 기준은 도서관법의 장애인 도서관 설치 기준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세움으로써 가능한 한 많은 시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점자출판이 가능한 기관으로는 시각 장애 학교, 복지관, 단체, 주식

회사 등이 있으나,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곳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비영리 법인과 단체는 범위가 너무 넓어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 점자 출판의 실질적인 대표 기관이면서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하는 장애인(점자) 도서관을 주된 대상으로 삼았다.

제5조(민감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28056호, 2017. 5. 29.>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6. 나가는 말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한글로 된 자료를 읽고 쓰는 것은 공기를 마시는 것과 같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시각 장애인에게는 한글 점자로 된 자료를 구하는 것이 많이 힘든 형편이다. 모든 국민을 위한 복지 정책이나 서비스가 ‘시혜’가 아니라 ‘권리’인 것처럼 ‘점자 사용’도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로 실현되면 참 좋겠다. 이러한 면에서 40년 이상 점자를 사용하고 있고, 30년 이상 점자 정책과 제도 발전에 몸담아 온 사람으로서 「점자법」이 시행되는 것이 감개무량하고 앞으로의 행보에도 많은 기대를 하게 된다.

「점자법」을 통하여 점자 사용이 권리로 보장되고 차별받지 않기를 기대한다. 정확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 온전한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이 수립되어 집행되기를 기대한다. 점자 문화가 확산되고, 국민의 점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점자 출판에 종사하고 있는 시설과 종사자들의 처우가

나아지기를 기대한다. 한글 점자 반포 100주년이 되는 2026년 이전에 11월 4일 ‘점자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제정되어 대통령과 함께 기념행사를 갖게 되길 기대한다.

또한 법에 포함하려고 했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하는 것과 점역사·교정사·점자 지도사의 자격 제도가 국가 자격으로 제도화되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시각 장애인도 점자를 마음껏 읽고 쓰며 평등한 사회,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게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김영일(2016), 『점자법 시행령(안)』 제정 방안: 점자법 발전 방향 및 하위 법령 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2016. 11. 9.),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_____(2017), ‘점자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 조사와 점역 교과용 도서의 범위’, 《점자법 시행령 공청회 자료집(2017. 2. 15.)》, 문화체육관광부.
- 김호식(2017), ‘점자출판시설 지원 기준과 점자 전문인력 관련 사항’, 《점자법 시행령 공청회 자료집(2017. 2. 15.)》, 문화체육관광부.
- 조성재(2013), ‘점자의 발전, 어떻게 해야 하나: 점자 사용 촉진을 위한 점자기본법 제정을 중심으로’, 《국회장애인복지포럼 토론회(2013. 6. 20.)》.
- 최동익(2016), ‘점자법 제정에 대한 의의’,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임직원 워크숍 자료집(2016. 7. 14.)》